

한국 경제적 행복지수 높이려면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상무 유병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기대는 경제적인 행복감을 높여 주는 것이다. 아쉽게도 지금 한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행복감은 경제적 안정성, 경제적 우위감, 경제적 발전성, 경제적 평등감, 경제적 불안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100점 만점에 불과 40점이라는 낙제점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대상 수의 제약 등으로 평가 상의 한계가 있으나 새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해 준다.

첫째는 소득 증대만 된다고 해서 경제적 행복감이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평균 소득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실제 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적 행복감은 오르지 않게 된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이 단순한 수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물가 안정, 사교육비와 주거비용 절감과 같은 보다 서민생활 밀착형이 되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성과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평등감이 너무 낮고 경제적 불안도는 매우 높은 까닭이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소득 양극화, 상시적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이 경제적 불행감을 높여 주고 있는 셈이다. 7% 경제성장이 지금처럼 계층간 부의 편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면 비록 고성장이 실현된다 해도 경제적 행복감은 증대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중장년층 가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연령별 경제적 행복도를 조사해 본 결과 40대가 가장 힘든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계 소비지출 구조로 볼 때 자녀의 학비 부담이 제일 크고 경조사와 같은 경상외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실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40대부터 명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년의 조로화 현상’이 심화되어 한국의 중장년층은 극도의 경제적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주는 한편, 소득 공제 확대나 과세 표준의 세분화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소득세 체계를 개선하여 이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네 번째는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행복은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학력에 비례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저소득으로 인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저소득 계층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경제적 행복감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영세민 거주 지역에 대한 공교육 투자 강화, 저소득층 우수 인재에 대한 국가나 기업의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체계적인 저소득층 교육 강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에는 경제적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그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자신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경제

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는 열정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이 괴리를 충분히 채워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만큼 불만도 증폭될 위험성이 높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확대하는 요소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강한 경제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것이다.